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경포해수욕장 여름경찰서 개장	1
江原日報	03면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시대 함께 이끌자”	1
江原日報	03면	강원-제주자치도의회 결속 다지는 족구 한판	2
강원도민일보	27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원 '허심탄회' 특별한 만남	3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 성공시대 이끌 특별법 3차 개정 총력"	4
江原日報	16면	양구 軍 유희부지에 제2농공단지 조성	5
강원도민일보	20면	양구군, 군 수의계약·보호구역 해제 강조	5
강원도민일보	11면	"댐 관리권 지자체와 나눠야" vs "물은 공공재 국가 소관"	6
江原日報	온라인	제11대 도의회 1년...성과와 과제는?	7
강원도민일보	23면	[의정칼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숨은 조력자 '정책지원...	8
강원도민일보	16면	"인제군 남면·소양호·내설악 포함 관광단지 조성 탄력"	9
江原日報	21면	“국내 유일 코미디 연극제에서 마음껏 웃고 즐겨요”	10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동해 망상골프장, 올해안 착공...막바지 토지 매입 협상 관...	11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 소방의 미래...새내기 소방관 92명 실전 배치	13
강원도민일보	02면	"수도권 강원시대 기반 닦은 1년" 김진태 도정 취임 1년 성...	14
강원도민일보	09면	"반도체 되겠어 비아냥 수용 못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14
강원도민일보	03면	"신중·면밀 검토"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실상 철회	15
강원도민일보	01면	정부 긴축재정 기조 강원 국비확보 비상	16
강원도민일보	12면	춘천시 교육자유특구 추진 동력 확보 '기대'	17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동해바다 최고"...강릉경포해수욕장 피서객 북...	18
강원도민일보	05면	"폭우·폭염 잇따라 농작물 걱정" ... 내일부터 다시 장마	19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공공기관 이전 계획 즉각 수립을	20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특별자치도 성패, 교통망이 좌우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민선 8기 1년, 각오 새롭게 다지는 계기 되기를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안전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23

江原日報

2023 07 01 ()

[포토뉴스]강릉 경포해수욕장 개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개장식이 1일 중앙광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수상안전구조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릉 경포해수욕장 여름경찰서 개장식이 1일 중앙광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권혁열 도의장, 이동우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개장한 1일 백사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파라솔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개장한 1일 백사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파라솔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 07 03 ()

12



경포해수욕장 여름경찰서 개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여름경찰서 개장식이 지난 1일 중앙광장에서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이동우 강릉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7 03 ()

27

강원도민일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의원 '허심탄회' 특별한 만남

강원·제주특자치도의회 교류회

100여명 참석 지속적 경험 공유

춘천 방문 만찬·축구대회 개최

현안 공유 등 소통·유대 강화

강원과 제주 특별자치도의회가 축구 대회를 갖고 닭갈비 만찬을 여는 등 유대를 강화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지난 달 30일 춘천에서 닭갈비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양 의회 의장단,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상견례가 됐다.

강원과 제주는 지난해 7월 본지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계기로 그해 10월 상생발전 업무협약 등 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왔다.

만찬은 강원·제주 위원회별 현안과 특별자치도로서의 장·단점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 앞서 춘천 송암동에서 열린 양 의회의 의원들 간 축구대회도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 친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친선 축구대회가 지난 달 30일 춘천 송암동 스포츠타운에서 열렸다.



지난 달 30일 송암동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축구대회 경기 모습.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의장은 2일 본지 통화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허심

탄회하게 양 의회의 장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을 교환했다"며 "제주와 강원 양 의회의 정서가 잘 맞는다"며 "순박하고, 진솔하고, 정도 많다"고 말했다.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은 "친밀감을 높이는 데 체육행사가 큰 몫을 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법 '도 조례' 제정 사항이 많아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경험을 공유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길수 강원자치도의회 강원특별

자치도 지원 특위 위원장은 "대표단만은 게아니고, 전체 의원이 만나서 의미가 있었다"며 "위원회별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강원도에 머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홍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현장도 방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는 청정바이오, 그린수소 등 신산업 발굴을 하는 상황"이라며 "분야는 다르지만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전했다.

이설화

2023 07 03 ()

03

江原日報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시대 함께 이끌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지난 달 30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갖는 등 교류 활동을 펼쳤다.

江原日報

2023 07 03 ()

03

강원-제주자치도의회

결속 다지는 족구 한판

춘천서 양의회 교류활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춘천에서 만나 체육활동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양 의회는 이날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에서 권혁열 강원자치도 의장,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 경기를 펼쳤다. 경규철 춘천시족구협회 이사의 심판으로 땀 흘리며 승부를 펼친 참석자들은 닭갈비 만찬에도 함께하며 소통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상생발전 협약’을 한 양 의회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강원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의원들은 지난 1일까지 도내에 머무르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은 “제주자치도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한 덕분에 우여곡절 속에서도 극적으로 강원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끈끈하게 교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장은 “강원과 제주 정서가 비슷한 느낌이다. 저희가 걸어왔던 길 중 좋은 것은 배우고 더 발전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2023 07 03 ()
03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성공시대 이끌 특별법 3차 개정 총력”

11대 도의회 1년 성과·과제

민선 8기 제11대 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했고, 상임위원회는 1개가 증설돼 활동했다. 도의원들이 꿈은 1년간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준비 과정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입을 모았다. 남은 과제 역시 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3차 개정은 전략적으로 접근, 2차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례 297건의 재검토와 고도화를 통한 법제화 후, 올해 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 4월 전 가결을 목표로 둔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으로 확대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의회 특례 필요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한다. 또 1년간 도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계가 도입, 18명이 활동 중으로 다음 달 6명이 추가 채용된다.

권 의장은 제도 도입 후 과거에 비해 의원 발언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며 향후 도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원회별 활동=도의

특례 297건 재검토·고도화 통해 연내 국회 상정 목표
7개 상임위 활동 호평 ... 찾아가는 의정·도정 견제 집중

회 7개 상임위원회도 활발했다. 운영위와 기획위는 향후 도민 기대에 부응할 특례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심영곤)는 강원자치도 출범을 위한 다수의 건의·촉구안 발의를 성과로 꼽았고 기획

행정위원회(위원장·한창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꼼꼼히 심의했다고 자평한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는 추후 현장 활동과 도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는 농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 등을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하고 축산 조사료 지원 등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바이오·데이터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는 양자산업 등 강원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방향 설정 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지진 대비 조례 제정으로 경각심을 심었던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미개설된 도내 국도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연계선 지능인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등을 성과로 꼽고,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 건물 점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07 03 ()

16

江原日報

양구軍 유희부지에 제2농공단지 조성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서흥원 군수 계획 밝혀

【양구】양구군이 군부대 유희 부지를 활용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박귀남 의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공무원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를 위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렸다.

설명회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에 대한 권한을 자치도로 이관,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과 환경영향평가·군사보호구역 조정·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수의계약 등을 통해 미래산업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흥원 군수는 “미활용 군용부지 특례 보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제2농공단지, 리조트 건설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및 양구역사 개통에 맞춰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발전의 전환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과 김재식 군 기획예산실장이 주민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20

양구군, 군 수의계약·보호구역 해제 강조

찾아가는 강원특자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서흥원 양구군수,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부의장, 박귀남 양구군의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명선 부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서흥원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추진할 양구의 권역별 발전구상을 소개했다.

서 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발

전전략으로 산지유통센터(2사단보수대), 제2농공단지(21사단정비대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반려동물 테마파크(21사단헌병대대)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변경·해제 건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급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납품체계 구축을 위해 군부대 수의계약 유도,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분야의 경우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개정된 특별법 적극 검토와 함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께 보전산지에 소재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농촌활력 진흥지구 등 개정된 특별법 적극 검토 활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군민들은 질의를 통해 양구지역은 소양강댐과 화천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 ‘수면개발허가’ 권한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또 군사시

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는 한 구절을 갖고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은 토지 8건, 국방·농업 각 6건 등 63건의 특례를 발굴했고 보고회, 주민·전문가의 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 특례발굴과 논리보완,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향후 개정 때 입법의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2023 07 03 ()

11

강원도민일보

“댐 관리권 지자체와 나눠야” vs “물은 공공재 국가 소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 ②

7. 소양강댐 수익은 누구 몫인가

댐이 들어서면서부터 물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물이었는데, 댐으로 인해 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고 피해가 발생했다. 소양강댐 준공 50년이 지난 지금도 물은 여전히 갈등의 소재다.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자체가 댐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재 지역과 ‘물은 공공재로 국가의 소관’이라는 정부의 입장 차이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다.

■ 피해는 주민이, 수자원 사용·이익은 정부가

소양강댐이 준공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댐 주변 지역들의 낙후, 이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수용량이 최대규모인 소양강댐의 경우 댐으로 인한 발전·용수판매 수입금은 전국 최대수준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댐 건설법에 따라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댐은 환경부장관의 소관이다. 피해는 지역이 보고 있지만, 이익은 정부가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발전·용수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금 비중 대비 지원금액이 낮아 실제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전국 27개 댐 수입금 4728억원 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2622억원, 전체 대비 55.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댐에서 나온 출연금은 407억원, 이 중 지원금은 202억원으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의 비율이 49.63%에 불과하다.

소양강댐만 따져보면 2022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분석 결과 소양강댐의 수익금은 951억원으로 전체(4728억원) 대비 20.11%다. 이 중 소양강댐의 출연금은 142억원(발전 26억원·용수 116억원)으로 전체 출연금 747억원 대비 19%다. 소양강댐의 지원금은 78억원으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55.0%로, 절반을 겨우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양강댐의 출연금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피해 규모 대비 절반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공동 성명을 내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주민들이 수몰, 규제로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댐 건설로 피해를 받은 강원, 충북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찾기 위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지자체가 댐 운영·관리해야’…현실 가능성은

결국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구조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댐 운영·관리에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댐 소재지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댐에서 나온 출연금을 한 데 모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강원으로 한정하면 소양강댐에서 나온 출연금의 일부를 횡성댐·평화의댐 주민들과 나누는 셈이다.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을 보면 소양강댐은 50%대지만 횡성댐은 지원금액의 2~3배가 넘는 300%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수입금과 출연금이 없는 평화의댐 주변 지역 역시 해마다 8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장 강원부터 각 댐의 지



전국 댐 출연금 한데 모아 지역별 지원금 배분
소양강댐 작년 출연금 142억원·지원금 78억원
출연금 대비 지원율 55% 불과 ‘타당성 논쟁’
강원·충북도 성명 “댐 주변지 정당한 보상율”
“댐 건설 초과이익의 지자체 환수” 주장도 제기
지방의회 차원 대응법 발족·관련법 개정 움직임

강원지역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현황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단위:만원)

구분	연도	발전부문		용수부문		출연금 합계	지원금액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
		수입금	출연금	수입금	출연금			
소양강댐	2018	279억7300	16억7800	399억7600	79억9500	96억7300	56억6500	58.56%
	2019	386억3300	23억1700	503억1700	100억6300	123억8000	62억5300	50.50%
	2020	557억3700	33억4400	453억2400	90억6400	124억8000	63억9000	51.49%
	2021	358억2500	21억4900	517억8800	103억5700	125억6000	63억2400	50.56%
	2022	422억6600	25억3500	528억6000	116억2900	141억6400	77억8900	54.99%
횡성댐	2018	8800	500	16억9700	3억3900	3억4400	9억5900	278.77%
	2019	1억400	600	17억3500	3억4700	3억5300	9억8100	277.90%
	2020	1억4100	800	16억900	3억2100	3억2900	9억9500	302.43%
	2021	1억2800	700	15억3900	3억700	3억1400	9억7500	310.50%
	2022	1억7400	1000	16억3200	3억5900	3억6900	9억8600	267.20%
평화의댐	2018						8억2000	
	2019						8억5600	
	2020						8억9500	
	2021						8억6800	
	2022						8억7100	

수입금·출연금 없음



■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시 군의회 대응협의체 발족식이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당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박기영 위원장을 비롯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당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촉구했다. ■ 소양강댐 건설 당시의 상황. 댐이 들어서면서부터 물은 갈등의 씨앗이 됐다. 소양강댐이 건설된 지도 50년이 지났지만 ‘이 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쟁점의 소재다.

사진제공=K-water

원금액에 대한 타당성, 지급의 당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는 성명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대상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물은 공공재’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며 “물이 그 지역에 흐르고, 댐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그 지역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온 국민이 사용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기조”라고 전했다.

지역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 50년 간 1973년 공사 당시 투입한 건설비는 모두 회수했으니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연구원은 “정책 특목”을 통해 ‘소양강댐 건설 당시 비용은 288억 3800만원이며 이중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비용은 81%인 233억 7100만원’이라며 “댐 사용권을 얻은 수자원공사는 50년간 감가상각을 하는 동시에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1년~2018년 현금기준 추정이익은 5001억원으로 산출됐고 발전매출액 대비 공사 부담 투자비 회수율은 163.5%”라며 “초과하는 수익은 댐 피해지역의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했다.

K-water 측은 소양강댐의 초과 수익은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지적과 댐 운영·관리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본지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 정치권 움직임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댐 소재·주변지역(춘천·화천·양구·인제) 시·군의원들은 최근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시·군의회 대응협의체’를 구성했다.

박기영 위원장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댐 주변지역의 피해상황,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정부의 이익, 이를 지역사회와 환원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댐 운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지자체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3차 개정안에 담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50년간 피해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전력·용수판매, 신재생에너지까지 포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지역에 돌아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제철 춘천시의원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 연구회’ 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갖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짚어볼 방침이다. 박제철 춘천시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내용도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댐 건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 역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댐 사용권자가 댐 건설에 따른 비용 대비 초과한 이익을 달성한 경우 해당 댐이 소재한 지자체에 그 수익을 나누도록 하고 지자체는 그 재원으로 주민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취수부담금을 통한 유역관리기금 설치로 보다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현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 07 03 ()

江原日報

제11대 도의회 1년...성과와 과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장 큰 성과이자 안착이 중요 과제
정책지원관 제도도 1년 맞아...추후 1인 보좌관제 도입 추진
7개 상임위도 1년간 활발 활동, 각 상임위별 추진 성과.과제



지난달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 모습. 강원일보DB.

민선 8기 제11대 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했고, 상임위원회는 1개가 증설돼 활동했다. 도의원들이 꿈는 1년간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의원들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가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준비 과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남아있는 중요 과제 역시 자치도의 성공 안착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갑자기 생긴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어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촉구 성명, 결의대회, 국회 1인 시위 등 모든 대책을 강구했다"며 "3차 개정은 전략적으로 접근, 2차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례 297건의 재검토와 고도화를 통한 법제화 후, 올해 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 4월 전 가결을 목표로 둔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으로 확대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 특례 등 도의회 특례 필요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한다. 또 1년간 도의회에는 정책지원관제가 도입, 18명이 활동중으로 다음달 6명이 추가 채용된다. 권 의장은 제도 도입 후 과거에 비해 의원 발언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며 향후 도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원회 활동=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도 활발했다.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향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특례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심영곤)는 강원자치도 출범을 위한 다수의 건의.촉구안 발의를 성과로 꼽았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한창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꼼꼼히 심의해 유독 부결, 수정 가결이 많이 나왔다는 자평한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는 추후 현장 활동과 도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는 농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의미있는 조례로 평하고 축산 조사료 지원,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전임 도정 사업을 정리하고 바이오.데이터 산업 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는 양자산업 등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지진 대비 조례 제정으로 경각심을 심었던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미개설됐거나 확장이 필요한 도내 국도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운영 내실화, 경계선 지능인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등을 성과로 꼽고,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 건물 전검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11대 도의회는 1년 간 9회의 회기 동안 180건의 조례안을 접수, 120건을 원안 가결, 49건을 수정가결했으며 6건 부결, 3건 철회, 2건을 계류시켰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2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숨은 조력자 '정책지원관'

의정칼럼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전국청년
지방의원협의회강원도협의회장

작년 7월 힘차게 출발한 제11대 강원도의회(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강원도의회의원 49명 모두는 민생현장에서 끊임없이 도민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총 9번의 정례회(3회)와 임시회(6회)가 열렸다. 조례안 180건(의원발의 86건)을 비롯해 예산안·동의안 등 총 3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며 현 상황을 점검하고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24건의 도정질문과 8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을 견제·감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살기 좋은 강원을 만들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다.

현대 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 도약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상황에 놓였다. 광역의원인 도의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또한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2022년 1월 13일 시행됐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여러 제도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정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의 도입, 이른바 '정책지원관' 제도이다. 정책지원관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조례 제정·개폐부터, 예·결산 심의 등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증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 취약했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치 중 하나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제11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정책지원관 6명의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18명을 두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법령에서 정한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 24명의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전문인원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의 의정 지원을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성과들과 도의원 개인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이 제도의 효용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다.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 활

동을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연구가 가능했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도 도입 전과 후에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조직 배치와 운영 방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방식을 시도하며 조직 내 안착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가 유입되고 있으나 정작 의회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 밖에도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있겠으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보완해 가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만큼 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가 선진화하려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포함한 의회 전체의 전문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안팎으로 힘을 모은다면 2주년, 3주년 그리고 임기 말에는 더욱 발전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16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 30일 인제문화원에서 열렸다.

“인제군 남면·소양호·내설악 포함 관광단지 조성 탄력”

찾아가는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중첩 규제 접경지 한계 벗어날 것”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 30일 인제문화원 다목적강당에서 열려 강원특별법 특례와 지역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원도와 인제군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 최상기 군수, 이춘만 군의장과 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도·군 관계자 등

을 비롯한 지역 사회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의 중점안인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효과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상기 군수는 “군에서 건의한 특례 조항이 강원특별법에 반영되면서 지역발전동력사업의 축인 남면 정자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 내설악 백담계곡 친환경탐방인프라 구축사업 등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 나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평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국내 유일 코미디 연극제에서 마음껏 웃고 즐겨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역밀착형 연극축제가 막을 올렸다.

(사)춘천연극제는 지난 1일 봄내극장 야외주차장에서 ‘2023 춘천연극제’ 개막식을 갖고 연극열전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참여형·관객주도형’ 축제를 상징하는 개막행사 ‘웃즐데이’로 시작됐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들로 플리마켓을 운영하는가 하면 채 완성되지 않은 설치 예술품을 전시, 시민들과 함께 제작에 나서는 등의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창작극단 ‘깍두기’가 펼치는 마술극 ‘심장’을 비롯해 지역 전문 공연팀들의 화려한 무대들도 이어져 개막식 열기를 고조시켰다. 최윤정 시제조협 회장이 아이들과 함께 기획한 파워댄스 등 다양한 공연도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춘천연극제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춘천연극제 화려한 개막 ... 참여형·관객주도형 운영
지역 소상공인 수공예 플리마켓·설치 예술 퍼포먼스



◇2023 춘천연극제가 지난 1일 봄내극장 야외주차장에서 개막했다. 10월28일까지 봄내극장 등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사진은 이해규 춘천연극제 이사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등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신세희기자

창단한 ‘시민극단 봄내’도 소개됐다. 지난 5년 동안 연극의 ‘맛’을 배운 이들은 올 8월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민연극제’에 참가, 도내 유일 본선 참가팀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전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춘천연극제는 코미디 연극의 재미와 웃음을 일상에 녹여 연극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국내외 대표 명품 코미디 연극제로서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우리의 인생과 공들여 하는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각본 없는 연극과 같다”며 “연극이 있어 행복하고 흥미로운 춘천에서 커다란 무대를 즐기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코미디 연극 축제로서 모든 사람을 춘천으로 부르고, 또 행복과 웃음을 선사하는 최고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규 춘천연극제 이사장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사랑받는 작품들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이무철 도의원과 김보건·김영배·박노일·유홍규·정재에 춘천시의회원을 비롯해 백창석 도 문화관광국장,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한중일 조직위원장, 박계원 신한은행 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빈기자 forest@

2023 07 02 ()

강원도민일보

동해 망상골프장, 올해안 착공...막바지 토지 매입 협상 관건

주민설명회 거쳐 환경영향평가 진행중



▲ '동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사 더씨뷰는 최근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에 본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조감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동해 망상골프장이 주민설명회를 치르는 등 필수 행정절차들을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된 연내 착공을 위해서는 막바지 토지 매입 협상이 관건이 되고 있다.

'동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사인 더씨뷰는 최근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이동호 동해시장, 최재석 도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에 본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더씨뷰는 망상동 산 97번지 일원 120만2851㎡의 부지에 1400억원을 투자하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올해말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씨뷰측은 지난 5월말쯤 주민설명회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에 본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고, 8월 시에 실시계획인가·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승인이 나오는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2~3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 '동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사 더씨뷰는 최근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에 본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가 한달쯤 지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도 그만큼 지체되는 데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잔여 토지 매입 협상도 진전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사측은 현재 사업구역내 토지보상이 86%정도 진행된 만큼 미보상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10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씨뷰는 골프장 코스외에 2층짜리 건축연면적 8300여㎡ 규모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매입중인 4만3000여㎡ 부지에 80세대 규모 2층 단독형 골프빌리지도 건축할 계획이다.



▲ 더씨뷰의 동해시 망상동 산97번지 일원 예정부지에 내걸린 분묘 이장 및 보상안내 공고 현수막 모습.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18홀을 27홀 또는 36홀로 확장하고 당초 계획인 200실 이상의 콘도미니엄과 위락·관광시설·수목원 등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84만㎡의 토지가 추가로 필요한데, 삼표시멘트 부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지라 토지확보가 쉽지 않다.

더씨뷰 협력사 청담엔지니어링은 이날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지구 일원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을 설명한데 이어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와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항목별 저감방안을 발표했다.

최재석 도의원은 "주민·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대로 이행해 달라"며 "명품 골프장으로 조기에 조성해 관광객 유치 등 동해시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더씨뷰 관계자는 "공사·운영시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고용창출·인구유입·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다 하겠다"며 "주민들과 적극 협상, 조만간 토지매입을 완료해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1차 준공후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 07 02 ()

江原日報

강원 소방의 미래...새내기 소방관 92명 실전 배치

제38기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졸업식 개최
이유찬 등 92명 졸업생 소방대원으로 임용
"태극마크와 소방 흉장의 책임감 잊지 말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교장:김재운)는 지난달 30일 제38기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졸업식을 열고 이유찬 등 92명의 졸업생을 신임 소방대원으로 임용했다. 사진=강원자치도소방학교 제공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강원 지역 새내기 소방관 92명이 도내 소방관서에 배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는 지난달 30일 제38기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졸업식을 열고 이유찬 등 92명의 졸업생을 신임 소방대원으로 임용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한영·문관현 도의원과 김문하 태백소방서장이 참석해 신임 대원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교장:김재운)는 지난달 30일 제38기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졸업식을 열고 이유찬 등 92명의 졸업생을 신임 소방대원으로 임용했다. 사진=강원자치도소방학교 제공

신규 임용된 대원들은 지난 2월6일 입교해 21주 동안 법령,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 도내 전 소방관서에 배치된다.

김재운 강원자치도소방학교장은 "졸업과 함께 자신의 어깨에 새겨질 태극마크의 힘과 가슴에 품게 될 소방 흉장의 책임감을 잊지 말아달라"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곁에 언제나 먼저 다가가는 소방대원의 초심을 지닌 채 현장에 나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3 07 03 ()

02

강원도민일보

“수도권 강원시대 기반 닦은 1년”

김진태 도정 취임 1년 성과 자평

취임 1년을 맞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중심으로 미래산업·SOC·맞춤형 복지, 4대 도정혁신 등 ‘인구 200만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은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민선 8기 도정 출범 1년’ 성과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형 ▶인터뷰 9면

■민선8기 성과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 육성 기반 조성

•SOC 확충(춘천~속초 동서고속철·여주~원주복선 전철 착공, 삼척~강릉 고속철·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확정)

•육아기본수당 전국 최초 만8세 미만까지 확대·보훈수당 2배 인상 등 맞춤형 복지

•오색케이블카 사업 연내 착공 준비

•도청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도청 강릉 제2청사 개청

•광역지자체 최초 반값 농자재 지원·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농어민 지원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민선8기 도정 집권2년차 주요현안

•인구 200만

(5대 관광벨트 조성·자유무역 지정 등 체류인구 확대)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도로·철도망 확충)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글로벌 교육도시·강원과학기술원 등)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채무감축, 세출 구조조정)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09

“반도체 되겠어? 비아냥 수용 못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취임 1주년 인터뷰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년 간 조직·인사 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도정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을 자부한다”고 했다. 김지사는 최근 강원도민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산업을 키워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러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진행=박지은 정치부장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실감이 잘 안 난다. 벌써 1년이 지났나 싶다. 지난 1년은, 기반을 닦은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일하겠다.”

-민선8기 김진태 도정, 주요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꼽아 본다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국비 9조 원 시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확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1조 채무 중에 28.7% 감축, 육아기본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춘천 동내면 도청 신청사부지 선정과 100만㎡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원주반도체 교육센터 출범,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태백 미이용산림 바이오 매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도 성과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착공, 도청 강릉 제2청사 설치,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등도 이루어 졌다. 김진태 도정의 성과라기보다는, 도정지권과 도민들이 푹푹 풍채 이뤄낸 우리 모두의 성과다. 그보다도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도정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을 자부한다. 앞으로도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이어가려고 한다. 전국 최초 재정준칙을 조례로 마련하고, 용역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있다. 규제혁신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를 해소하는 상당한 권한을 얻게 됐다. 기업이, 강원도 투자를 망설이게 했던 많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

반도체 교육센터·공유대학 등

테스트베드 원주 반도체산업 씨앗

집권 2년차 산업·SOC 더욱 집중

기업 활발한 투자 이끌어 낼 것

국비 9조원·오색케이블카 확정 등

1년동안 기반 닦으며 성과 이뤄

강원특별법 통과 4대규제 해소

기업·사람 넘치는 강원 만들기 총력

-1년 전, 취임사를 통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의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가 ‘자유’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유, 정부가 만든 각종 규제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 더 많은 정책자유를 확보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를 풀고 기업이 와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년, 가장 아쉬웠던 점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본지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구하러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영

“하나를 짚는다면, 강원특별법 개정도,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내겠다. 산업을 키워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러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집권 2년차, 더욱 집중해야 할 현안 과제는.

“산업과 SOC이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을 강원도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은 반도체인데 정부와 삼성전자는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을 조금만 확장시키면 원주로 올 수 있다. 용인에서 원주까지 50km 밖에 안 된다. 지난 1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GS에너지, 테슬라 코리아 등 많은 기업들과 만나서 협력했는데, 더욱 접점을 늘려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또 하나는 SOC이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철도망 연결 사업도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꼭 예타 통과시키

고,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내겠다. 산업을 키워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러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대표공약인 반도체 산업 추진,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해선 진척이 더딘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더 열심히 뛰어야 했다”는 비판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그게 되겠어?’ 식의 비아냥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만땅에 꽃을 피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기르는 데에는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교육센터라든가,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든가, 앞으로 구축하려 하는 테스트베드가 원주 반도체 산업의 씨앗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씨앗을 확보하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장군수들과

의 호흡은 어떠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권혁열 의장님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18개 시장·군수님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 특히, 강원특별법안에 ‘도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이 56번 나오는데,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과 달리 시·군·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최초의 특별자치도이다. 도와 18개 시·군과 더욱 더 강한 협력 호흡을 보여드리겠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 할 말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지난 1년 간 거센 파고를 헤쳐 올 수 있었다. 단 1년 만에 이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도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향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고, 새로운 특별 자치시대의 주인공은 도민들이다. 항상 도민 여러분의 편에서 서서,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정리/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03

“신중·면밀 검토”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실상 철회

국토부 장관 일정 전면수정 시사
유치전 과열 총선 이후 발표 선회
도 기관 32곳 유치 목표 예의주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무산 우려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밀려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이 또 다시 발목이 잡힐 우려를 낳고 있다.

원하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앞이 막혀 있어 저도 정말 괴롭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 계획 일정에 전면적인 수정을 시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300여개의 이전 지역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원주혁신도시전경

2차 공공기관 이전, 강원특별자치도 유치 희망 기관 32곳

금융기관(5곳)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농협

우선 및 연계 유치 기관(22곳)

코레일유통(주)·한국무역보험공사·코레일관광개발(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코레일네트웍스(주)·한국환경산업기술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체육회·한국임업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사회보장정보원·(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강원 특수성 연계 유치 기관(5곳)

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환경보전협회

일부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초부터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등과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취합했

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원 장관은 국회에서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어 당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도간·자치단체간, 혁신도시·비혁신도시

간 경쟁이 과열되자 선불리 이전 지역 발표시 갈등이 표면화해 내년 국회 의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총선 이후 발표로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춘천시민연대를 비롯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는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내년 총선 유불리와 당리당락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국 무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동해시와 횡성군 등 전국 비핵신도시·인구감소도시 18개시군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2차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만 한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인구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치열한 유치전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을 비롯 한 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방연구원, 농협중앙회 등 국방·안보, 건강·의료 분야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대상 리스트로 올려놓고 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연구원은 충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충북, 농협중앙회는 전북 등 강원도와 동일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유치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창현

2023 07 03 ()

01

강원도민일보

정부 긴축재정 기조 강원 국비 확보 비상

강원특별자치도 개막 첫번째
9조5000억원 목표 설정 불구
정부 내년 사업 원점 재검토
도 주요사업 2조1329억원 필요

윤석열대통령이 '재정 다이어트'를 강조,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민선8기 도정에서 국비 9조원 시대를 첫 개막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조 500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그러나, 자체 세수 부족에 이어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 방침까지 더해져 내년도 국비 확보전은 녹록지않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데에 돈을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

다. 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최근 전달했다.

이같은 여파는 그대로, 강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내년도 국비 확보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자체 사업은 물론 각 시·도에서 요구된 사업까지 재검토 선상에 올라 예산 칼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연례·반복, 법정업무 등 국비 확보가 확실시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각 실국이 취합한 내년도 국비 확보 주요사업 예산은 2조 1329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각 사업들은 김진태 지사의 공약사업 및 도정 주요현안 사업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김 지사는 "산업과 도로·철도 등 SOC 부문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등 강원형 첨단산업을 전면 추진하면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등 SOC 조기착공 준비를 서두른다는 구상이다. 이들 사업의 성패는 국비 적기 확보가 좌우한다. 또, 각 실국에 배분된 김 지사 공약사업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업무를 다루는 산업국에만 36개나 쏠려있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국 각 시·도의 경쟁 역시 치열한데다 전례없는 강도의 정부 긴축건전재정 방침으로 각 지자체들이 비상이다.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비 최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12

춘천시 교육자유특구 추진 동력 확보 '기대'

교육부, 춘천 연구모델 참조 방문
‘최고의 교육도시’ 시정 역량 집중
대학교 협력 첨단산업 인재 양성

‘최고의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민선8기 춘천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최근 춘천시에 교육자유특구 연구 관련 시·군 모델 참조를 위해 춘천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춘천은 육동한 시장 취임 이후 ‘최고의 교육도시’를 목표로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취임 후 1년간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와 시민전세대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

다.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민·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를 발족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1년간 실현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 같은 모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특구나 교육자치 등 교육 관련 특례가 필수적인데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과 균형발전특별법안 등에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법안에 반영된 교육특례 중 춘천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율학교나 농어촌유학 특례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춘천시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자유특구 지자체 연구 모델 참조를 위해 춘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다시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춘천의 그간 행보를 중앙에서 눈여겨봤다는 증거”라며 “춘천의 노력을 특구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대학·학교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스타트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제 구축에 착수했다.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를 구성, 지역대학 총장들과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자원이 지역에 녹아들고 디지털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첨단 지식산업 인재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교육이 잘 되는 도시는 알아서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며 “교육주체간의 신뢰구축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05

“폭우·폭염 잇따라 농작물 걱정”...내일부터 다시 장마

영서·영동 무더위 탓 시민 불편
강릉 밤 최저 26.7도 열대야 기록
“이른 더위 에어컨 전기요금 부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강원도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강원기상청은 3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에 이어 2일에도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이날 도내 주요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정선 33.1도, 속초 33도, 양

양 32.5도, 양구 32.2도, 춘천 31.9도, 동해 31.9도를 기록했으며 홍천 31.7도, 강릉 31.5도, 태백 31.2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밤 사이에도 온도가 식지 않아 강릉에서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릉은 1일 밤부터 2일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26.7도를 기록,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로 기록됐다.

3일에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3일 도내 낮 최고기온은 영서 33~35도, 영동 26~29도로

예보됐다.

시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짙은 무더위 탓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홍천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강모(56)씨는 “최근 장마 때문에 계속비가 내려비가 안 오는 날 잠깐 일하기 위해 밭에 나가면 한낮에는 너무 더워 일하다 쓰러질 것 같아 제대로 일도 못한다”며 “특히 인삼은 많은 양의 비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면 땅 속에서 썩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원(33)씨도 “최근 며칠간은 밤에도 날씨가

가 너무 더워 아이가 잠에 들기 힘들어 했다”며 “이번 달에도 밤새 에어컨을 틀어 전기요금이 걱정되는데 벌써부터 더 이더면 한여름에는 얼마나 많이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폭염이 심각해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오전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71%)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3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서로 높아지고, 위기경보가 상향된 것은 지난해(7월 2일)와 비교했을 때 하루 빠르다.

한편 오는 4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도 전역에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비는 5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정호 kimjh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 23

공공기관 이전 계획 즉각 수립을

-6월 기한 넘긴 국토부, 난제 뚫고 마무리지어야

을 6월까지로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자, 강원 등 비수도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300개소로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구현이 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이내 기본원칙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기에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신중론으로 흐르다가 자칫 무산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원 장관은 늦어지는 사정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불가피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이전기관이 400개가 넘고,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기관노조에서는 설득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전 대상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당초 예상돼 왔고, 국토부의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및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원 장관이 직접 언급하고 보도 자료를 낼 정도로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확인해 왔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초대로 6월 중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세부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시일이 걸립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원 장관이 1월 5일 충북도청에서 발표한 ‘빠르면 연내 이전 착수’라는 약속은 허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위기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감은 비수도권에서의 즉각적인 여론 대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기에 대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해만 하더라도 151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3500건에 육박하는 사업을 통해 4조원대 지역발전 성과를 냈습니다.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국토부에서 바짝고삐를 당겨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3 ()
/ 23

특별자치도 성패, 교통망이 좌우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수도권 강원시대' 지름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도가 역점을 둘 '미래 강원 2032' 발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그 중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는 지역의 도약을 위한 정책으로 도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은 교통망 확충입니다. 산업 구조 개선과 관광 산업 육성 등 과제는 접근성 개선 없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서울·경기 지역은 물론, 영호남 등 전국으로의 교통 수월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가 강원형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신규 추진 중인 최우선 철도 현안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 연장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공약이자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 공약입니다. GTX B노선 춘천 연장은 국가 철도계획 반영 추진을,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연내 예타대상 선정이 목표입니다. 또,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망 3개 노선 확충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가 큼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포천~철원, 양구~영월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전 단계인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강원 남부권 숙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제2차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제성(B/C)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는 해당 도로망이 수소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필수인프라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통망 개선 없는 '수도권 강원시대'는 요원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과 산업·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면한 교통 현안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범도민 차원에서 응집력을 보여야 합니다. 도는 물론,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단체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골 공약으로 희망 고문이 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도 정치권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江原日報

2023 07 03 ()

/ 19

민선 8기 1년, 각오 새롭게 다지는 계기 되기를

민선 8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는 점에서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도정은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나 고용 등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정 열정은 넘쳤으나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지원 사례는 찾기 힘들다. 도교육청 역시 신경호 교육감이 사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가 커진 데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부재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은 민선 8기는 향후 지역 현

안 해결, 서민 경제 및 민생 분야 정책 강화, 도민 신뢰 회복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를 중심으로 18개 시·군, 도교육청,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 등은 이달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은 특례 작업에 착수해 10월까지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차 개정이 군사·환경·산림·농업 등 4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3차 개정은 교육특례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산업특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차 개정안에 교육특구와 교육자치 등 24건의 교육특례를 제안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20건이 무더기 삭제됐다. 지역 개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산업특례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

요하다.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규제 완화 권한을 토대로 산업 육성 특례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동해안 해양산업 육성,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접경지역의 강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과제다. 여기에 올 9월 열리는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등도 당면 현안으로 꼽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5월 광역자치단체평가에서 김진태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48.7%(매우 잘 함 24.1%, 잘하는 편 24.6%)를 기록했다. 전 달 46.8%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하락세였으나 반등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책임·역할 더욱 막중 비전 성과 컸지만 민생 분야 기대 못 미쳐 특별법 3차 개정·신뢰 회복 등 향후 과제

도민생활만족도는 61.0%(매우 만족 14.3%, 만족하는 편 46.7%)로 전국 7위였다. 이 조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선 8기의 잣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미래 비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피부로 느끼는 민생 분야는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 기업이 잘 돌아가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 도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도의회, 교육청, 18개 시·군정과 의회는 지난 1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오를 새롭게 다지는 민선 8기 1주년이 돼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 07 03 ()

/ 19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안전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7월1일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했다. 동해안 청정해변과 한여름 무더위라는 계절적 요인은 강원도가 지닌 독보적인 자산이다. 해수욕장 개장을 계기로 이 자원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지역 주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피서문화의 품격과 만족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바가지요금과의 총력전에 나선 것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몇몇 상인의 바가지요금은 관광객들의 불신을 사고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일회적 한철 장사에 사활을 거는 일부 몰지각한 상혼이 만들어내는 과열음이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대부분의 업소가 정성 들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한두 곳에서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전체가 나쁜 것으로 오해받게 된다. 피서지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소가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자정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줌도둑을 잡는 것은 치안의 몫이지만 바가지요금 등은 피서지 업소들의 몫이다. 바가지 상혼은 피서관객들을 쫓아버리

는 원인이다. 피서객들을 가장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도 바로 바가지요금이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실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꽃게 바가지 논란은 상인들의 자정대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냉소를 받기도 했다. 지난 강릉단오제 역시 강릉시가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가격 실명제를 도입했음에도 막판 슬러시 요금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각 자치단체는 피서객 등 관광객 맞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질서, 청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허점은 없는지 점검 또 점검해 볼 일이다. 해수욕장 일대 주차와 교통 흐름에 이르기까지 교통 문제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 오물 수거 등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 및 현장 대책도 현안이다. 과도한 호객행위나 불친절 사례는 청산해야 마땅하다. 동해안 여름바다는 전 국민의 여름축제가 열리는 현장이다. 철저한 서비스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시생활과 빈틈없는 일상,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동해안은 피난처이자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다.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동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